

일본 경제 회복의 원동력과 시사점

글 | 구분관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근 일본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10년 불황에서 분명 벗어난 것 같다. 그동안 수출과 설비투자에 의존한 불안한 성장에서 소비도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과 설비투자에 이어 소비까지 살아나면서, 일본경제는 길어만 보였던 '10년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일본경제가 불황에서 탈출하는 데는 중국경제와 디지털 가전이 큰 역할을 했다. 일본의 對중국 수출은 2000년 이후 연평균 30% 가까운 성장을 지속했다. 그 덕분에 일본의 총수출도 호조를 보였고, 2004년에는 무려 20% 이상 늘어났다. 중국 경제가 확대될수록 일본의 상품은 물론, 부품·소재 등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이다. 그에 힘입어 적자를 지속하던 對중국 전기전자 업종의 무역수지가 2003년 이후에는 흑자구조로 전환되었다. 일본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 디지털가전 시장의 확대도 일본경제의 회생을 이끌어 낸 중요한 힘이 되었다. 특히 新三種의 神器로 불리는 평판 TV, DVD 레코더, 디지털 카메라는 최근 수년간 출하가 연평균 50%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힘입어 일본 전자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다. 예컨대 최근 3년간 히타치, 마쓰시타, 도시바, 샤프 등 일본 전자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액정 TV에서 일본 1위인 샤프는 최근 3년간 매출

이 연평균 13%, 경상이익은 연평균 46% 증가하는 대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對중국 수출 호조와 디지털가전 시장의 확대는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설비투자를 늘리게 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10년 불황 속에서 위축되어 있던 일본의 내수가 디지털 가전을 중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하자,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상품개발 경쟁을 가속했고, 이는 다시 새로운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내수가 더욱 커졌다. 바로 '설비투자'와 수요간 '善순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게다가 완성품의 투자확대는 다시 반도체, 액정, PDP 등 핵심부품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로 파급되었다. 결국 중국 경제와 디지털가전이 수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경제성장이 소비 증가로 연결되면서 일본경제가 회생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경제가 살아난 데는 중국경제와 디지털 가전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경제의 부상과 디지털 가전이라고 하는 외무효과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여건이었다. 그런데도 유독 일본경제만 살아났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10년 불황을 겪으면서 일본기업들이 철저부심으로 힘을 기르는 노력, 다시 말해 기업의 철저한 회생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기업들은 지난 10여 년간의 불황을 겪으면서 철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일본기업들은 불황타개를 위해 일본적 인사제도의 핵심이었던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에 대한 포기까지 선언하며 몸집을 줄였다. 마쓰시타가 2001년 한 해에만 1만 3천여 명의 인원을 감축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일본기업들은 2000년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실시해 인건비를 대폭 줄였다. 또 개별기업 차원에서 채산성이 없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비효율적인 공장을 폐쇄해 경쟁력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사업재구조축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차원의 사업 구조조정에서 한계에 봉착한 경우 기업 간 사업통합으로 경쟁력을 강화했다. DRAM

에서는 NEC와 히타치가 사업을 통합해 한 개 업체로 집약하고, 시스템 LSI에서는 도시바·후지쓰, 히타치·미쓰비시가 통합해 NEC와 더불어 3강 체제로 전환했다. 철강에서도 NKK(日本鋼管)와 카와사키제철이 통합했고, 조선도 NKK와 히타치조선, IHI(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와 스미토모중공업이 통합했다. '성공했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과감하게 '强者 연합'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 공급과잉을 해소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일본기업들은 적은 매출로 이익을 내는 기업체질로 전환하였다. 2003년 일본기업의 손익분기점 비율이 버블 붕괴 이후 최저 수준인 85%라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불황기에 인력과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지해 왔다는 점도 일본경제와 기업의 회생을 이끌어 낸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한 연구개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가전시장'이라는 신시장의 창출이 가능했고, DRAM에서의 패배를 시스템 LSI에서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기업들은 끊임없는 공정 개선을 통해 제조 기반도 강화했다. 일관된 공정개선과 낭비제거를 통해 불황 속에서도 최고의 이익을 경신하는 도요타의 성공신화를 보며, 일본기업들은 생산 현장에서의 낭비를 줄이고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데 노력했다. 나아가서는 일본 제조현장의 우수한 기능 인력을 활용하여 多품종·소ロット 제품 생산에 보다 적합한 방식인 '셀(Cell) 생산방식'도 개발했다. 캐논을 비롯하여 도시바, 마쓰시타 등 많은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셀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 코스트를 줄임과 동시에 생산성도 향상함으로써 한국이나 중국기업의 추격을 따돌렸다. 그리하여 일본 기업들은 국내생산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생산기반을 일본 국내로 U턴하게 되는 계기로도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은 버블 붕괴 후 2000년까지 9번에 걸쳐 124조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을 했다. 결론론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쳤고,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본의 정부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62%에서 2003년 140%로 높아졌고, 그 부채를 상환하는 데만 매년 정부예산의 20% 이상 소비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 때문에 2001년부터 집권한 고이즈미 정권은 재

정투입 보다는 '구조개혁'이란 가치를 걸고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바꿨다.

매년 구조개혁의 실천전략을 책정·보완하며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군 역할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엔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기업(起業)을 촉진하고, 전국적으로 300개가 넘는 구조개혁특구를 설치하여 규제를 완화했다. 또 제조업에도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공립학교 운영에의 민간참여 확대 등 최근 3년간 1천 건 이상 규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은행의 부실처리 촉진을 통해 금융기반도 강화하였으며, '산업재생기구'를 설립하여 부실기업을 조속히 회생시키는 수단도 강구했다. 기업의 지적재산 창조·보호·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관련법도 강화하였으며, 산업클러스터와 지적 클러스터도 육성하고 있다. 바로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 노력을 했던 것이다.

일본과 일본기업의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 하나가 바로 일본은 세계적인 부품·소재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소형모터, 실리콘 웨이퍼, 화합물반도체, 세라믹 필터, 청색 LED, 광통신용렌즈 등 고기능 부품, 소재는 일본이 거의 독과점하다 시피하고 있다.

액정, PDP, 유기EL 등 평판디스플레이도 생산은 한국과 일본, 대만 3개국에 독점 생산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관련 핵심 제조설비, 부품은 대부분 일본이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소재의 강점을 바탕으로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의 수출이 늘어날 때 일본의 수출도 늘어나는 효과를 누려왔다.

또한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가계도 비교적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일본의 가계부채/가계자산 비율은 1993년 이후 줄곧 14%라는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처럼 가계가 비교적 건전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해소되거나 신제품 등이 출현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소비 확대로 연결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거대하면서도 까다로운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까다로운 시장인 만큼, 일본 기업들에게는 제품개발과 출시 과정에서 결함을 쉽게 발견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소위 테스트 베드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일본 소비자들

의 요구하는 품질 수준에 맞추게 되면 곧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경제가 10년 불황에서 탈출한 원동력과 배경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민간의 활력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경제가 부활한 것은 기업의 활력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정책의 초점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래야 투자가 살고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기업과 국민이 활력을 되찾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보다 먼 미래를 겨냥하여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 산업 발굴"을 위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품·소재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정부가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거나 요구하기에 앞서,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매출이 줄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체질로 바꾸나가야 한다. 해외이전을 고려하기에 앞서 생산기반을 다지고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잠재력을 키워 R&D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미래성장을 위한 '씨앗 뿌리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혁신을 통해 수익성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평가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단기실적에 연연하기 보다는 기업이 미래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는 지를 평가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